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00회 제2차 정례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1.

복지문화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달서구청장(여성가족과장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(금)
- 회부일자: 2023. 11. 3.(금)
- 검토기간: 2023. 11. 6.(월) ~ 11. 10.(금)

2. 개정이유

-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, 상위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함(안 제12조~제15조, 안 제19조)
-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 규정 마련(안 제26조)
-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27조~제36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

정책결정과정, 공직 및 경제활동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, 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를 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,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 제19조 제2항의 아동, 청소년, 노인을 삭제하여, 장애인, 한부모, 미혼모, 북한 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지원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음.
- 특히 달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달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법 제11조의2에서는 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, 단서조항을 통해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4항 후단에서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(심의회, 위원회 등)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,
- 법 제11조의2를 준용하거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4항 후단을 인용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그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심의·조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살펴보면 기능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명시하고 용어의 사용을 정비하였으며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등 개정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양성평등기본법

제11조의2(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)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관리직 목표제”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직종·직급·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

2.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

3.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

4.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

5.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

-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(공직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·보직관리·승진·포상·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4조(경제활동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·채용·임금·교육훈련·승진·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승진·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④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·출산·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모집·채용·임금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을 조사·연구하여 법령,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5조(모성·부성의 권리 보장)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·출산·수유·육아에 관한 모성권·부성권을 보장하고,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·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.

제33조(복지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·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, 한부모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성별영향평가법

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방위원회의 기능,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